

## 박근혜 대통령이 32번 청년을 언급한 시정연설에 대한 32가지 반박

- 박근혜식 노동계약, 재벌특혜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위해 더 이상 “청년”을 팔아먹지 말라!
-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정화에 ‘올인’ 말고, 진짜 청년·민생대책에 ‘올인’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1년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오늘 마침 단비가 내려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1) 정말 국민을 존경한다면, 국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올인’하고, 노동계약을 강행하고, 민생·청년대책엔 이토록 소홀할 수는 없겠죠. 청와대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을 지을 때도 국민들에게 물어보면서도, 왜 노동정책이나 청년대책에 대해서는 그 직접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제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마음대로 강행하시는 것인지요?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방만경영이 줄어들었고,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업과 도전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2)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 청년들이 보기에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청년희망펀드도 그렇고요. 이게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민경제를 살리는데 무슨 역할을 했나요? 실효성이 없다는 것,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 가시뿐 아니라 많은 덩어리 규제들도 제거되고 있습니다.”

- 3) 정말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개선도 하고 수정도 해야겠지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꼭 필요한 사회적 규제, 공적규제마저도 모두 ‘암덩어리’ ‘단두대’ 등의 지극히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서 규제를 없애나가면서,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것, 공공적인 것, 노동 및 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공적 규제와 공공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3/4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1.2%를 기록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세계 13위에서 올해는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4) 그런데, 왜 다들 우리나라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절규하고 있을까요? 국제통화기금을 인용하고 있는데, 왜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기구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엔 귀를 닫는 것이죠?

“이렇듯,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의 여러 지표는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청년(1)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삶의 짐을 덜어드리고 청년(2)들의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경기회복 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고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5)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청년을 종종 인용하는데, 청년들은 그 진정성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과 청년단체들이 제시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확산,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대폭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 지급, 청년 교육비, 주거비 문제 해결, 대학생 졸업유예자들에게까지 등록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6) 멀쩡한 교과서를 검·인정에서 갑자기 국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비정상적이고, 전 세계 대부분 나라와 반대로만 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부터 검허히 수용하시죠?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공약하고도 이를 폐기했으면서도 ‘사회안정망 확충’을 얘기하시는 것은 민망하지 않으신지요?

“공공부문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 7) 말로는 공공부문을 개혁한다고 하면서도, 친박 인사들이 공기업 및 공공부문 곳곳에 낙하산으로 투하되고, 자원외교 사기사건과 같은 혈세 탕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왜 개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 공공부문 개혁이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개혁 국면 때 이야기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로 국민들의 노후 불안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 8) 공공부문의 수지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LH공사가 공공택지를 매각해 재벌대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그만큼 서민·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9) 안전을 백번 강조하셔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현 정부·여당의 행태,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 나야 합니다.”

- 10)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자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재벌대기업이 이를 탈취해가거나 헐값으로 후려쳐서 자신들만 배를 불리는 행태는 알고 계시는지요?

“G20과 OECD 등 국제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높은 이유는 그것이 글로벌 시대의 경제대안이기 때문입니다.”

- 11) 학교 앞에 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도박을 활성화하고, 학교 앞에 재벌 관광호텔을 짓는 것이 창조경제입니까? 창조경제가 무슨 뜻인지, 무슨 구상안지는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 취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의 창업허브가 되고 이 혁신센터가 중소기업 혁신의 거점이 되어 청년(3)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 12) 누구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일자를 만들었다는 실적이 나와 있나요? 혁신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벤처·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13)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고용 대책은 “우리 청년들, 다 중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느닷없이 청년들을 자꾸 팔아먹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청년대책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울러, 청년(4)들의 창업을 원 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고, 청년(5)층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창업 선도대학, 창업 사관학교 등에서 지역의 청년(6)사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까지 지원하고, 유망 벤처기업에서의 현장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서 준비된 청년(7) CEO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 14) 청년이라는 말이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당연히 창업을 추진하는 청년들을 지원해야겠지만, 왜 청년들은 이런 말들이 재탕 삼탕으로 느껴지고 허무하게만 들릴까요? 실제 청년들을 위한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절감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위에서 말했던 청년고용 대책들은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은 커녕 피고용을 걱정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신규로 조성해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창업의 거점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는 규모의 증액보다는 투자의 효율화·내실화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 15) 벤처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전에, 이들이 겪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횡포,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탈, 갑을 문제, 협력중소기업 수탈 문제부터 좀 해결하세요! 재벌특혜와 편향으로 그런 조치를 안 할 테니 해외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IoT, 5G 이동통신 등 미래먹거리 창출과 기초연구 강화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투자성과를 가시화하고,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등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을 하고, 관행적 지원사업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 16) IoT, 5G 이동통신, 프라운호퍼 등 어려운 영어를 남발하고, 좋은 한국말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민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남발하면서 자신의 실책을 감추시는 것 인지요. 통신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공약은 언제 지키실 것인지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과도한 통신비 때문에 큰 고충과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이끌 또 하나의 날개는 문화융성입니다. 문화융

성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산업간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을 일으키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면서 청년(8)들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입니다.

- 17)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성을 말살해가고,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가장 왕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나 예술가들을 탄압하면서 문화융성을 이야기하고, 청년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애니메이션과 게임분야 지원을 480억원으로 확대하여, 킬러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청년(9)들이 행복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있는 성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청년(10)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년(11)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청년(12)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NCS 기반의 직업훈련시스템을 기업 주도로,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우수한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년(13) 1만명을 직접 교육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규모를 3만5천명에서 7만7천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 18)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다양성을 훼손하면서, 청년들의 넘치는 상상력을 방해하면서 문화로 어떻게 청년일자리 대폭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역시 여기에서 나오는 청년 예산, 청년 훈련 등도 재탕, 삼탕 반복되는 용어들로서,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정책이겠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청년(14)희망펀드'도 제 안했습니다. 청년(15)희망펀드는 순수한 민간기구인 청년(16)희망재단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19) 민주적인 논의는커녕 보좌진들과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통령이 시작한 청년희망펀드는 결코 좋은 청년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국민들의 기부로 떠넘기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고, 강제모금, 대기업별 할당의 분위기가... 박정희식 독재모금인 청년희망펀드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계의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입니다.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 임대주택 11만 5천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를 금년보다 50% 증가한 1만 5천호를 공급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 20) 한달에 100만원 안팎에서 200만원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뉴스테이가 어떻게 가계 주거비 대책이 될 수 있고,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습니까? 건설자본과 투기꾼·강부자들을 위해 비정상적인 집값을 유지하고 부채를 늘리게 해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권, 주거비 문제, 전월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 21)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꼭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몽땅 풀어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사유화시켜 모두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로 주려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육서비스를 종일형, 맞춤형, 시간제 등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2배 이상 늘려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육아와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금년 5천700명에서 1만4천60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 22) 말은 늘 그렇게 하면서도 무상보육 예산은 모두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서 지방 재정을 파탄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관련 일자리의 질은 형편없기만 합니다.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역시 청년들에겐 대안이 아니고 질 낮은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의 대명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없이 국가경제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 23) 당연히 희생과 고통을 분담해야겠지만, 왜 재벌 대기업의, 권력 상부층의 희생과 고통 분담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득권 계층과 강부자 계층들의 탐욕과 독식은 비호하면서, 서민·중산층, 노동조합에만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한 정책이고, 가장 절실한 고통 분담 정책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모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17)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24) 그전에는 청년에 관심도 없고, 청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순간, 4대개혁을 이야기할 때부터, 특히 ‘노동개혁’을 이야기 할 때부터 청년을 수시로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실제 이런 정책들이 청년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기획으로 밀어붙이다, 여의치가 않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국민들의 크고 작은 반대 의견이 커져나가자, 느닷없이 4대개혁에,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고통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18)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인 노동개혁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17년 만에 청년(19)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고용절벽에 서있는 청년(20)들과 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부모세대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가 실행되면, 능력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 운영, 장시간 근로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제고하여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21)층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 25) 역시 청년을 무더기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더욱 쉽게 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고, 파견 비정규직을 전면화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쉽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일 수가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청년 고용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는 거의 창출되지 않고, 청년들도 직장에서 ‘노동지옥’을 겪을 수밖에

에 없는 노동계약에 불과합니다.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 26) 청년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은 도입되지도 않았고,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방해하고 있고, 실업급여도 지급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금액의 하향선도 더욱 낮춰놓고 그것이 개선이라고 말한다면 이걸 정말 ‘답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 2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일부 높이는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상시지속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인데, 왜 이 대책은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22)들이 무거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청년(23)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 양성에 힘 쏟을 것입니다.” “금융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에는 청년(24)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28) 교육개혁에도 청년들을 끌어 들였지만, 정작 청년들과 학생들이 가장 원했던 무상교육이나 반값등록금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고용의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도 해결은 해야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더욱 황당한 것은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사방팔방에 낙하산으로 일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비서 등이 꼭 뽑혀야할 청년들을 밀어내고 불법, 부당하게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례 등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에서 미스매치 해소 전에, 채용 정의 실현부터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역시, 금융개혁에도 또 느닷없이 청년을 앞세웁니다. 금융의 공공성, 안정성을 더욱 해칠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즉 ‘금융개혁’을 위해 역시 청년을 악용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25)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26)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27)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28)들이 원

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입니다.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서 수용할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 29)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법안,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법안을 개혁이라고 우기고, 교육 환경, 주거환경을 훼손할 것이 뻔하면서, 재벌특혜가 분명한 학교 앞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또 청년을 들먹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이런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쁜 정책을 펼치면서 청년들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호텔들이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청년노동을 착취 수준으로 수탈하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나요?(롯데호텔이 청년유니온 김영 조합원을 84일동안 84번이나 날마다 계약서를 쓰게 하고, 취업규칙 문자마자 바로 해고한 사건 포함)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 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29)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30)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31)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30)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과 노동정책은 대부분 노동개혁이라서 노동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역시 좋은 청년 정책 모두 마다하고 왜 노동개혁을 청년고용 대책이라고 강요, 압박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박근혜식 노동개혁”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알바 노동 문제 해결, 청년임금 대폭 인상(최저임금 대폭 인상), 오마바 대통령처럼 노동과 청년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노조에 가입하라는 말은 왜 안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 후 줄곧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런 나라입니다.(중략)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입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

갈 것입니다.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1) 자꾸 학생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을 거론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학생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싫다 잼아요. 학생세대·청년세대들 대부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멸절한 검·인정 체제에서 역사왜곡과 역사쿠데타의 의도로 이 엄청난 정쟁과 갈등을 유발해놓고도 그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유채이탈화법'의 최고봉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런 못된 정책, 나쁜 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세대·청년세대들 정말 뽀나면 무섭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 그리고 우리 청년(32)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정개혁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사람의 큰 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 걸음씩이 더 크듯이, 우리 경제의 힘찬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갑시다.”

- 32) 마지막까지 청년을 호명하고, 청년을 팔아먹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요함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청년을 살리고, 우리 국민경제를 살리려면 가장 절실한 것은 중단없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여론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 32번이나 청년을 인용하고, 아무 이슈나 청년을 앞세우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은,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청년단체들은 그 진정성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얘기들이 대부분 오히려 청년들을, 청년 직장인들을, 청년 비정규직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청년들과 청년단체들이 제시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확산,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대폭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임금(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직장인) 노동조합 활성화, 알바노동자 생존권 확보,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 지급, 청년 교육비, 주거비 문제 해결, 대학생 졸업유예자들에게까지 등록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된, 제대로 된 청년대책인지는 조금만 연구해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부디 청년을 그만 파시고, 진짜 청년대책을 내놓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역사쿠데타식 '국정화'에 '올인'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국정과 청년대책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끝.